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20호

‘선수이자 학생’

유승민 "최저 학력제 폐지" 논란 "엘리트 체육"vs "학생 인권 학습권 침해"

유호경 이코리아기자

체육계 전문가들이제시하는 새 정부 학교 체육 방향①

"새 정부는 학교 체육 정책 반드시 고쳐야 한다"

스포츠저널리즘연구회

주요 후보 모두 10대 공약서 체육 외면해 좌절

대선 공약서 사라진 '체육'...정치권 무관심에 체육계 실망감

이동수 강원일보기자

[악플에 병드는 韓스포츠]

SNS 문 닫기부터 전담센터까지... 악플에 맞서는 구단·선수들

김진수 스포츠월드기자

제42대 집행부 출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구성 본격화...25일 투표로 13명 선출

이동철 연합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유승민 "최저 학력제 폐지" 논란 "엘리트 체육" vs "학생 인권 학습권 침해"

지난 24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학생 선수 학부모 간담회에서 “최저학력제 폐지, 출석 일수 기준 완전 폐지, 합숙소 부활을 임기 내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학생을 경기 도구로만 보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학생 선수 정책은 단순한 스포츠 정책이 아니라 교육권·인권·사회권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논란이 되는 최저학력제 폐지, 출석 기준 완화, 합숙소 부활은 사실상 과거의 엘리트 스포츠 체제로 회귀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성명을 통해 “학생 선수는 학생이자 아동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대한체육회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초·중등교육의 목적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품성과 자질을 배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헌재 1992.11.12. 89헌마88]”라며 “최저학력 기준의 유지와 강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일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헌법상 ‘교육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며,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규정으로 학생의 수료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운동부 소속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고도 수료를 인정받는 것은 교육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인정 결석 일수를 확대하겠다는 주장은 학습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퇴행적 발언으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 회장의 발언은 국제적 추세와도 괴리를 보인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학생 선수를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 보고, 학습권과 인권을 중심에 둔 정책을 운용 중이다.

미국 대학스포츠협회(NCAA)는 학생 선수에게 엄격한 학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교 성적(GPA)과 대학 입학시험(SAT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기 출전이 제한되며, 대학 재학 중에도 최소 학점을 유지하지 않으면 출전 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주당 훈련 시간은 20시간 이하로 제한되며, 심리 상담과 의료보장도 의무화되어 있다.

영국은 스포츠 아카데미와 학교 교육과정을 반드시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유소년 선수 역시 GCSE, A-Level 등 정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보호자 동의 없는 합숙은 아동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본은 과거 합숙 위주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서 탈피해, 문부과학성 주도로 ‘부카츠(부 활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학업 성취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훈련 참여가 제한되며, 교육적 균형을 고려한 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증 엘리트 스포츠학교를 운영하고, 선수 은퇴 이후 진로 전환을 돕는 이중 경력(dual career) 제도도 마련해두고 있다.

체육계는 다른 업종에 비해 은퇴나 실직 후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선수 경력자 진로 실태조사(2012~2023년)’에 따르면, 은퇴한 운동선수의 약 38%가 무직이며, 취업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엘리트 체육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학생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의 기반 마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해외처럼 ‘선수이자 학생’이라는 원칙을 제도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학교 체육 정책 반드시 고쳐야 한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체육 공약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 후보는 체육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산발적이다. 이전 대선 국면과는 다른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영향도 있다. 여하튼 체육은 정파를 떠나 중요하게 다뤄야 할 영역이다. 구성원이 건강해야 사회나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 그것은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하기 이전에 몸이 안다.

이달 스포츠저널리즘연구회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체육 정책의 방향성을 '학교 체육 공간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다뤘다. 미래가치를 담고 있는 학교 체육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해법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 반성적 성찰 등은 일회적 공약으로 이룰 수 없다.

학교는 한국 체육의 희망만이 아니라 모순이 응집된 공간이다. 정규 교과목인 체육 수업, 운동부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 일반 학생들의 클럽스포츠 활동이 공존한다. 국가는 학교를 '태극전사' 양성의 기지로 삼았다. 하지만 시대정신이 바뀌면서 승부지상주의의 폐해, 인권침해, 학습권 박탈, 진로 선택의 제한 등이 불거졌다.

국가는 2019년 민관 합동기구인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해 '한칼'에 과거와 단절하려고 했다. 하지만 주말리그 전환과 전국대회 축소, 최저 학력제, 수업일수 강화 등의 변화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지도자나 학부모, 선수들의 반발도 있다. 2011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이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강화가 시도됐지만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의 이상은 요원하다. 수학 과목 성적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듯한 입시제도 아래서 학교 체육 교과 시간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체육의 문제를 체육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고민하기 위해,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논쟁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토론 참가자: 정용철 서강대 교수, 박재현 한체대 교수, 장익영 한체대 교수, 오태규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완태 전 프로농구 엘지 단장, 사회 김창금 한겨레신문 기자. 5월24일 줌 토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체육 정책이 나올 것이다. 갑작스러운 정치 사태로 불거진 대선 국면에서 체육계에서도 이렇다 할 단일한 목소리는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

사회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체육 정책이 나올 것이다. 갑작스러운 정치 사태로 불거진 대선 국면에서 체육계에서도 이렇다 할 단일한 목소리는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 최근 정용철 교수가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그 얘기를 먼저 듣고 토론회를 진행하자.

정용철 교수: 현재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이고 스포츠 인권연구소와 문화연대 등에 멤버십을 갖고 있고, 거절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러 저러한 모임이나 행사에서 발언을 해왔다. 이번엔 스포츠 제도와 법에 관심이 많은 민변과 결합해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새 정권의 스포츠 정책이 어떻게 되냐를 놓고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의견이 모여 국회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스포츠 정책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자: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정용철: 합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이 우리가 꿈꾸는 스포츠 세상을 '스포츠로 살 만한 세상인가'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처음 발제를 했고,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 배울 권리에 관해 두번째로 발제를 했는데, 김 위원장이 최저학력제를 제일 선봉에서 얘기하면서 학부모연대 등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토론회를 마련해준 양문석 의원실이 학부모 등의 항의 전화 때문에 하루종일 업무가 마비됐다고 한다(웃음). 세 번째 발제는 모굴 스키 국가대표로 동계올림픽에 나갔던 서정화 변호사가 했다. 서 변호사는 고교 때 '수업 들어가려면 국가대표 포기각서 쓰라'는 말 듣고도 공부를 했다. 대학 로스쿨 갈 때부터 교류하고 있는데, 서 변호사는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되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유효기간이 다 됐다고 5년 전부터 주장해왔다. 위헌소송까지 생각했지만, 이것은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어서 할 수가 없는데, 다음 세대에는 이런 특기자제도의 강도를 낮춰, 운동은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대학 입시에 가산점을 좀 줘서 공부도 하고 운동하는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했다.

사회자: 체육 이슈에 법조계 분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체육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체육계 논의의 수준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일단 토론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서정화 변호사 사례다. 미국에서는 운동선수라도 당연히 공부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이 그대로 한국적 맥락이나 한국 문화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부분이 있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닐 수 있다.

미국에서 운동선수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운동은 당연히 열심히 하고, 다른 학생들은 파티에 가고 할 때도 엄격한 스케줄로 자기 운동하면서 수업 듣고 시험을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도 운동선수를 했다는 경험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구조다.

정용철: 대학의 최저학력 C 제로 롤은 미국의 NCAA에서 있는 것을 10년 전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가져왔다. 그것도 원래 안 되다가 정유라 사태 나는 바람에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본질을 좀 봐야 한다. 미국에서 운동선수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운동은 당연히 열심히 하고, 다른 학생들은 파티에 가고 할 때도 엄격한 스케줄로 자기 운동하면서 수업 듣고 시험을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도 운동선수를 했다는 경험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구조다. 반대로 우리는 학생이 운동한다고 하면 익스큐즈(양해)를 많이 하고, 때로는 운동 엘리트를 했다는 것이 핸디캡이 될 때도 있다.

사회자: 박재현 교수나 장익영 교수는 70~80년대 엄혹한 시절에도 선수로 대표까지 하면서 공부해 실존적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박재현 교수: 정용철 교수가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100% 동감한다. 또 체육시민연대나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점도 존경한다. 그런데 정 교수가 언급했듯이, 국회의 임오경, 진종오 의원과 장미란 문체부 차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 체육계 주요 라인업(빅 5)이 모두 엘리트 선수 출신이다. 체육계의 대표자들은 지금 체육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일까?

저는 학교 체육과 특기자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엘리트 스포츠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 당시, 정말 엄청난 기대를 했다. 관련 부서 차관들이 위원으로 들어갔고, 엘리트를 포함해 체육의 풀뿌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봤다. 그런데 그 혁신의 기회에서 결론을 끌어내거나 어젠다를 던지는 데 고민이 더 필요했다고 본다.

사회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우깡 포장지를 보고 샀는데 내용물이 새우깡이 아니라 양파링이 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최저학력제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명칭과 다르게 실제 내용은 최저학력이 아니다. 누군가 임의로 정한 임의 학력일 뿐이다. 지금 상황은 6년 전보다 혁신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박재현: 최저학력제가 체육계로부터 공감을 받으려면 제도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탁민혁 교수(영국 러퍼브러대)와도 최저학력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새우깡 포장지를 보고 샀는데 내용물이 새우깡이 아니라 양파링이 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새우깡을 산 사람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무슨 말이나면, 최저학력제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명칭과 다르게 실제 내용은 최저학력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최저학력이 아니라 누군가 임의로 정한 임의 학력일 뿐이다.(학생선수에게 정말 필요한 학력이라는 검증된, 객관적 근거는 없다는 뜻)
현재의 최저학력은 학교마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이를 최저학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최저학력에 대해 논리적 문제를 제기하면 혁신위원회 사람들은 '당신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몰아붙인다. 최저학력을 두고 학술 토론을 하거나 논리를 고민하면, '왜 당신들은 선수들에게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하느냐'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그 결과 나타난 반작용이 바로 체육계 주요 포지션을 엘리트 출신들이 역할을 하는 작금의 현실과도 연결돼 있다고 본다. 지금 상황은 6년 전보다 혁신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지금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회고하면 박재현 교수처럼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용철 교수 또한 할 말씀이 있을 텐데, 그나마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 논의의 장을 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장익영 교수: 스포츠 혹은 체육이 발전, 변화해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어떤 이견도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현상이 드러나면, 그 현상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것 같다.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이 무엇인지 진단을 잘해서 잘 치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픈 것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

최저 학력제나 체육 특기자도 그렇다. 체육 특기자 제도는 정 교수 말씀처럼 초중등이나 혹은 대학 고등교육법 안에 하나의 조항으로 입시 전형에 가까운 것이다. 그 체육 특기자 제도가 여러 문제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를 얘기해야 한다. 과거의 체육 특기자 제도는 현재 2025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 말해야 한다.

사회자: 체육 문제 해법 논의와 대안들이 표피적이었다는 지적 같다.

스포츠 승부 조작의 문제도 우리 사회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선수들을 비난한다. '너희들 왜 윤리적이지 않아'라고 선수들만 비난한다. 하지만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베팅 시스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최저 학력도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너무 커서 감옥에 넣을 수 없다'(too big to jail)는 식이다.

장익영: 본질은 없어지고 원래의 문제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발생한 현상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 체육은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전과 체육의 세 가지를 해야 하는 모순된 구조다. 그 특이한 공간에서 전문 체육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학교 체육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슈가 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게 입시라는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학습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운동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꼴이다.

탁민혁 교수와 많이 얘기하는데, 스포츠 승부 조작의 문제도 우리 사회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선수들을 비난한다. '너희들 왜 윤리적이지 않아'라고 선수들만 비난한다. 하지만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베팅 시스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스포츠의 기본 윤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스포츠 베팅이라는 제도를 스포츠에 얹어놓은 뒤 선수들만 비난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최저 학력도 마찬가지다. 학교 체육이나 특기자 문제를 얘기할 때 더 큰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너무 커서 감옥에 넣을 수 없다'(too big to jail)는 식이다. 이런 것들이 힘없는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그게 체육 특기자 제도의 학생으로, 승부 조작 사건의 선수들이다.

사회자: 중간 정리를 하면, 6년 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냈고 정책에도 반영됐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과연 그것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체육계 바깥의 외부 시선이랄 수 있는 오태규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자.

<blockquote>금메달 따는 일부는 성공하지만, 대다수의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훈련이나 교육 없이 광야에 내동댕이쳐져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는 문제다. 전인적인 교육의 틀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에서 꾸준히 고민해 야 한다.

오태규 연구원: 논의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보면 결국은 학교의 전인 교육과 학생 선수의 문제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학생 선수들은 일반 학생과 분리돼 있다고 본다. 외국에서는 똑같은 학생이면서 체육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학생 선수다. 우리는 두 영역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지덕체의 전인 교육으로 작동하고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만 잘하는 전문가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학교 전체 속으로 통합돼서 체육 좋아하는 학생은 체육으로 나가 전문 직업을 갖는 시스템으로 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가는 한 스포츠 엘리트조차도 빈익빈 부익부의 경향을 면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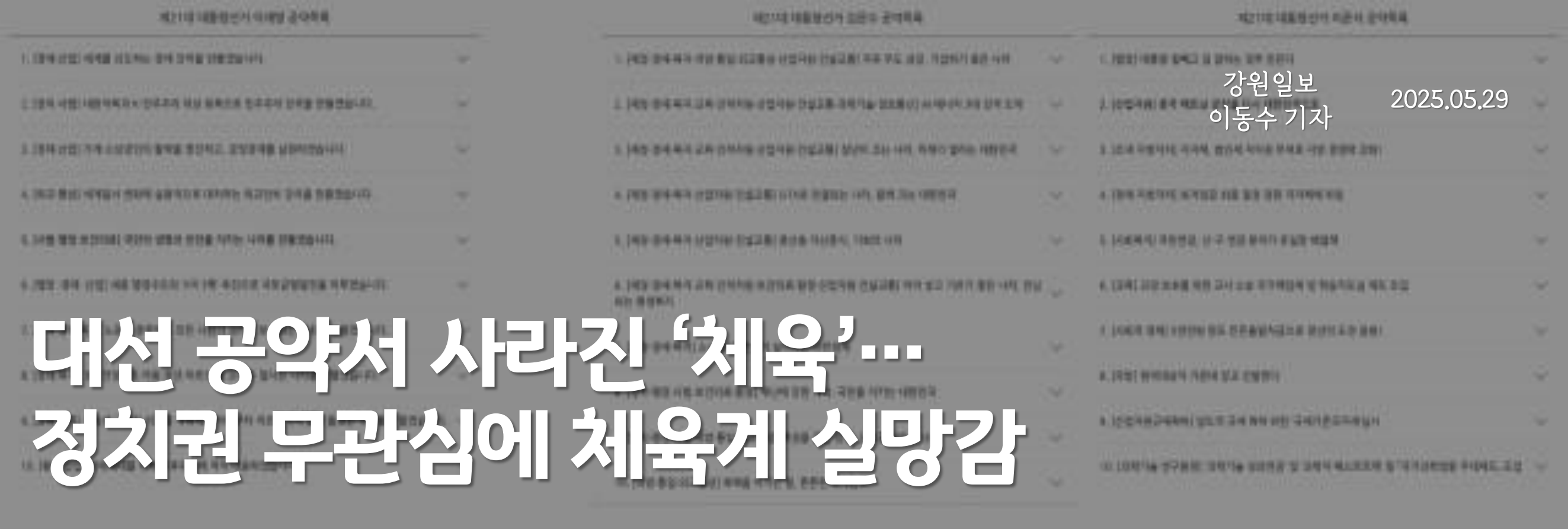
체육을 잘해서 금메달 따는 일부는 성공하지만, 대다수의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훈련이나 교육 없이 광야에 내동댕이쳐져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는 문제다. 다시 강조하면 학교 스포츠가 전인적인 교육의 틀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에서도 하루아침에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

사회자: 김완태 단장님은 어떤가요?

학생 선수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тезис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이나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예를 들면 학생 선수의 특수한 입장에 맞는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시간 배분, 사회적 보상 등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이 공론장에서 소통하고, 학생들을 대변하는 부모님들하고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김완태 단장: 학생 선수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тезис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이나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예를 들면 학생 선수의 특수한 입장에 맞는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시간 배분, 사회적 보상 등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이 공론장에서 소통하고, 학생들을 대변하는 부모님들하고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인공지능의 등장 등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다. 오태규 위원 말씀처럼 전인교육이 돼야 하고, 다른 한편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운명이 달라진다. 농구단 단장 시절, 예를 들면 고등학생인데 2m6~7cm로 국가대표급이다. 충분히 프로에서 뛸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데, 고교와 대학의 담합 때문에, 또는 학교장에 의해 대학으로 간다. 또 다른 선수 한두 명을 끼어서 간다. 이것은 선수나 학부모에게 직업이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강원일보
이동수 기자

2025.05.29

대선 공약서 사라진 ‘체육’… 정치권 무관심에 체육계 실망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핵심 공약 어디에도 체육 정책은 보이지 않아 체육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각 정당의 간판 후보들이 내세운 10대 핵심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강국’, 김문수 후보는 ‘AI·에너지 강국 도약’, 이준석 후보는 ‘지방자치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체육 관련 정책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체육계의 반발을 샀다.

이번 선거에서 체육 정책이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점은 2022년 대선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35개, 윤석열 후보가 12개의 체육 세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체육계 출신 전문가들이 대선 캠프에 참여해 정책 설계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체육정책 전문가들은 체육계 스스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체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능동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7일 ‘NO SPORTS, NO FUTUR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생활체육 확대 △전문체육 재정비 △스포츠 인권 강화 △국민건강 증진 등의 8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체육회는 “6월3일 대선을 앞둔 현재까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모두 체육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체육이 주요 정책 의제에서 소외된 현실”이라며 “체육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정치권과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고자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체육계 관계자는 “선거철이면 후보들이 행사장에 얼굴만 내비치고, 정작 정책에는 무관심하다”며 “체육은 건강·교육·지역경제와 직결된 핵심 영역인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부차적인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플에 병드는 韓스포츠] SNS 문 닫기부터 전담센터까지... 악플에 맞서는 구단·선수들

잇을 만하면 스포츠 스타들에게 쏟아지는 악플, 구단도 선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댓글 자체를 못 달도록 차단하거나 악플을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선수들 역시 개인 SNS 댓글을 막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도 진행한다. 선수들에게 공인으로서 SNS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을 교육하거나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응하지 마라”, “마인트컨트롤 하며 신경쓰지 마라”는 설명을 곁들인다. 물론 공식적으로 욕설이나 비방 같은 악플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심스럽다. 대응하면 악플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프로배구 A구단 관계자는 “선수 개인이 하는 SNS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 지난 시즌에는 감독님이 요청해서 구단 인스타그램 댓글을 아예 닫은 적이 있다. 한 경기 질 때마다 악의적인 의견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댓글을 닫고 나니 확실히 선수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든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예 구단에서 악플을 삭제하기도 한다. 프로축구 B구단 관계자는 “구단 공식 SNS에 달리는 악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처음에 이용자가 악플을 달면 삭제한다. 만약 이용자가 또 악플을 달면 아이디를 차단한다. 차단한 뒤에는 이유까지 설명한다. 항의할 것을 대비해 악플을 모두 캡처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에서 나서기도 한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KPFA)는 지난해 4월 ‘악플 방지 전담센터’를 개설했다. 선수와 선수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악성 게시물과 댓글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메일로도 제보를 받는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도 진행한다.

김훈기 KPFA 총장은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 외에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에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센터를 만들었다”며 “다행히 개설 이후 직접 대응을 하자 악플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다. 긍정적인 영향이 생겨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댓글이 클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고소·고발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김 사무총장은 “선수들도 가급적 조용하게 해결하길 원한다. 공인이기도 하고 선수들의 인권, 이미지 등을 다 고려해야 한다. 거의 사과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한다”고 덧붙였다.

선수들도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악플이 쏟아지면 본인의 SNS 댓글을 차단하거나 아예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또 여러 계정을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 개인 계정은 따로 둔 채 공식적으로 외부에 비치는 계정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다.

한 구단 관계자는 “(악플을 확인하기 위해) 댓글을 일일이 읽으면 나를 욕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힘들다. 완전한 감정 노동이다”라고 하소연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구성 본격화... 25일 투표로 13명 선출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제42대 집행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선수위원회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체육회는 오는 25일 13명의 선수위원(하계 종목 10명·동계 종목 3명)을 중앙선거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선출할 계획이다.

선출위원 후보는 40개 올림픽 종목(하계 33개·동계 7개)의 추천을 받아 등록을 마쳤다.

후보 자격은 만 16세 이상으로 올림픽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4년 이내 국가대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 중인 선수는 선수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93년 창설된 체육회 선수위원회는 스포츠인의 인권 향상과 은퇴 선수 진로 지도, 재능기부 등을 지원하며 올림픽 운동과 관련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수위원회는 21명 이하로 구성하며, 선출위원(13명) 외 위원은 체육회장이 선수 또는 선수 출신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임기는 체육회장과 동일하게 4년이다.

제42대 체육회 수장에 오른 유승민 회장과 문대성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등이 선수위원장을 역임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대전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설계안 확정...당선작은 이것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2_0003198599

"난 빨간 팬티"...초교 체육교사, 여학생들 앞 속옷 노출 '집유'

<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5800141>

생활체육 인구 증가... "인프라 확충"

<https://kjmbc.co.kr/NewsArticle/1466503>

고성군, 제1회 청소년 한마음체육대회 성료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602500516>

강원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공모 선정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060115032819978>

엘리트 꺾은 고3, 실력 증명 고2, 현역같은 父...삼부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1_0003197930

'1948 런던올림픽 선수단 서명문' 국립스포츠박물관에 전시

<https://www.yna.co.kr/view/AKR20250530074700007?input=1195m>

7월부터 전국 1만7300여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52806335677363>

31일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프로선수 사인회도 열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30022500051?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